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56
----------	------

발의연월일 : 2024. 11. 18.

발 의 자 : 안호영 · 주철현 · 어기구
이춘석 · 박희승 · 소병훈
이학영 · 박홍배 · 이용우
김주영 · 한병도 · 이원택
복기왕 · 김윤덕 · 윤준병
신영대 · 정동영 · 이성운
의원(18인)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전북특별자치도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산업의 구체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재정 특례 등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함.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산업 등 핵심산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전

락산업을 육성하고, 전북특자도 고도자치권(조직,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보완과 지방세 등 특례 규정을 마련해 경기침체, 지방소멸 가속화 위기에도 전북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지구 내 스마트농업 및 그에 연관된 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2조).
- 나.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하거나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4조의2 신설).
- 다.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 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음(안 제33조의2 신설).
- 라.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전북자치도 내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0조의3 신설).
- 마.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의 설치
· 운영 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99조의2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3
0년까지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요액
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
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안 제116조의5 신
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 및 그에 연관된 산업의 지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판로지원사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하거나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지정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운영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3(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 파견 특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 파견에 한정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전북자치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⑥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⑧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제7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탄소소

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편 제2장 제2절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지방의료원 지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 및 제12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제3편 제2장 제3절에 제30조의2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북자치도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전북자치도 내 수소특화단지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한정한다)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가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의2(신·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 ① 도지사는 「신에너지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에서 별도의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 2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공급한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될 수 있다.

제32조의3(분산에너지 기준 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4(수변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관리 우수지역에 해당하는 수변구역에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연구개발 및 실증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편 제3장 제1절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편 제3장 제2절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관한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관리 우수 지역에 해당하는 수변구역에 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제12조”를 “제10조, 제12조”로, “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산지전용 · 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 · 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로, “완충구역”을 “보호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1항제1호”를 “제11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궤도운송법」 제2조제13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 따른 궤도의 건설 사업에 대한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및 궤도 규모 기준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⑦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산악관광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산악관광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유림을 대부·매각·교환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3편 제4장 제1절에 제66조의2·제66조의3 및 제6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청년농어업인의 요건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6조의3(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이하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라 한다) 확대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등록할 수 있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현재 주민등록지
5. 통근·통학 등 정기적으로 방문·체류하는 사유
6.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직장·학교 등에 관한 정보(소재지 등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및 개인정보 수집·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북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반영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등록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의2(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평생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시범도시에서 평생교육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4편 제1장에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국립공원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공원법」 제73조의2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에 있는 국립공원 인근지역(관할구역에 공원구역이 있는 읍·면·동 중 환경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

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연공원법」 제7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편 제2장에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외국인 정착 활성화) ① 도지사는 외국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도시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시범도시 지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0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북자치도 내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0조의4(분산에너지 특화지정 우선 지정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0조의5(수도사업의 인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수도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0조의6(조세의 감면) 산악관광사업 시행자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9조의2 및 제10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자치조직권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2.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3.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②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

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성 예산에 기준이 되는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추가로 계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제1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제18조의3제2항,”을 “제18조의3제2항, 제19조제4항(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16조 중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를 “위하여”로 한다.

제5편 제3장에 제116조의2부터 제1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용지매립 및 조성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설치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6조의3(지방세 특례) 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7조제1항제3호,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14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세법」 제19조제4호,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6조의4(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변경 특례) 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하는 지방소비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가중치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100분의 500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6조의5(지방교부세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30년까지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

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노력의 정도를 반영하는 항목 및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p> <p>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 6.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p> <p>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 및 그에 연 관된 산업의 지원</p> <p>제22조의2(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 「농촌융 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도 불구 하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 는 기관 및 단체에 판로지원사 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24조의2(농생명산업 전문인력</p>

<p><신 설></p> <p>제26조(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p>	<p>양성기관 설치 등) ① 도지사는 <u>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u>를 위하여 <u>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하거나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u></p> <p>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지정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운영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p> <p>제24조의3(농생명지구 내 외국인 근로자 파견 특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u>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 파견에 한정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u></p> <p>제26조(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p>
---	---

의 진흥)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의 진흥)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 료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 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을 위하 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전북자 치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⑥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

<신 설>

는 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
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⑧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제
7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
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2(지방의료원 지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운
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및 제12호에 따른 성장
촉진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
지역

<신 설>

제30조의2(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

<신 설>

의를 거쳐 전북자치도에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전북자치도 내 수소특화단지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한정한다)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가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의2(신·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 ①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에서 별도의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공급한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될 수 있다.

제32조의3(분산에너지 기준 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4(수변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관리 우수 지역에 해당하는 수변구역에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신 설>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연구개발 및 실증

	<p><u>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p> <p><u>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제38조의2(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u></p> <p><u>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제49조의2(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관한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u></p>
<p>제52조(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①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p>	<p>제52조(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① ----- -----</p>

호의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5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 8. (생략)

<신설>

② (생략)

제57조(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1. ~ 8. (현행과 같음)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관리 우수 지역에 해당하는 수변구역에 한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제10조, 제12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악관광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③ (생략)

④ 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신설>

② -----.

-----제7조-----

---보호지역-----

1. ~ 4. (현행과 같음)

③ 「궤도운송법」 제2조제13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 따른 궤도의 건설 사업에 대한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및 궤도 규모 기준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11조제1항-----

1.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1. ~ 3. (생 략)

⑤ 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해
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
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
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
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⑥ (생 략)

<신 설>

<신 설>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⑦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산악관광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도지
사와 협의하여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산
악관광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
우 국유림을 대부·매각·교환
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

<신 설>

물을 기부·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66조의2(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청년농어업인의 요건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년농업인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66조의3(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이하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라 한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

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
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
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
보를 수집·등록할 수 있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현재 주민등록지

5. 통근·통학 등 정기적으로
방문·체류하는 사유

6.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직장·
학교 등에 관한 정보(소재지
등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북자치도 생활인
구 등록 시범사업 및 개인정보
수집·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
록한 전북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

<신 설>

<신 설>

부세법」 제6조에 따라 보통교
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북자치도 생활
인구를 반영하여 기준재정수요
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
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등록하도
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의2(평생교육 시범도시 지
정 등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
치도를 평생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
항에 따른 평생교육 시범도시
에서 평생교육을 육성하기 위
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육성
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평생교육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7조의2(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요청 등 특례) ① 「산업입지

<신 설>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83조의2(국립공원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공원법」 제73조의2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에 있는 국립공원 인근지역(관할구역에 공원구역이 있는 읍·면·동 중 환경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연공원법」 제7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0조의2(외국인 정착 활성화)

① 도지사는 외국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도시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시범도시 지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0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북자치도 내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0조의4(분산에너지 특화지정 우선 지정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0조의5(수도사업의 인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수도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시자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사

<신 설>

<신 설>

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0조의6(조세의 감면) 산악관광 사업 시행자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 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9조의2(자치조직권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2.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3.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②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p><u><신 설></u></p>	<p>제100조의2(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성 예산에 기준이 되는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추가로 계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수 있다.</p>
<p>제11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 ③ (생략) <u><신 설></u></p>	<p>제11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p>
<p>제114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u>제18조의3제2항</u>,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p>	<p>제114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 ----- -----제18조의3제2항, 제19조제4항(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한다),----- ----- -----</p>

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3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16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
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
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
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
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6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

-----위하여-----

-----.

제116조의2(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
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
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용지매
립 및 조성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설
치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신 설>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6조의3(지방세 특례) 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7조제1항제3호,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14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세법」 제19조제4호,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

<p><u><신 설></u></p>	<p><u>할 수 있다.</u></p> <p><u>제116조의4(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변경 특례) 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하는 지방소비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가중치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100분의 500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제116조의5(지방교부세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30년까지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u></p> <p><u>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제2항에 따</u></p>

라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지방
자치단체별 자체 노력의 정도
를 반영하는 항목 및 산정기준
을 정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
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정할
수 있다.